

공무원 범죄동향과 부패인식지수(CPI)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s on CPI and criminal trend of public officials

조정원(Cho Jung Weon)*, 최영출(Choi Young-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jor features of crime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and access the relationships on CPI and criminal trend of public official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

1. The unfairness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has been decreased continuously. The national effort seems to reduce it.
2. The criminal motive of public officials has the following orders ; carelessness > the others > accidental occurrence > and greed. This shows that the crime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has a close relationship to do with their everyday lives.
3. There is a strong and close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ies of the special Act Criminals and CPI.

Key words : 공무원(public officials),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범죄(criminal)

I.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1993년에 창설된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¹⁾는 대표적인 글로벌 반부패 국제 NGO로서 부패문제에 관하여 세계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기구에 의하면 2006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5.1(숫자가 낮을수록 부패의 정도가 심함)로 163개국 중 42위를 차지하였다.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993년 창립되어 부패방지에 전념하고 있는 국제 NGO로 현재 90개국에 조직되어 있으며, 그 사무처는 독일 베를린이다.

이 조사에서 아이슬랜드, 핀란드, 뉴질랜드가 9.6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 아시아권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9.4(5위), 홍콩이 8.3(15위), 일본이 7.6(17위)으로 나타나, 한국이 아시아권에서도 부패가 심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국제투명성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3년 창설되어 처음으로 ‘국제적인 반부패 협약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 그 실현 가능성을 확신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뇌물방지 협약이 1998년에, 또한 유엔 (UN)의 반부패 협약이 2003년 12월에 차례로 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 90여개 나라에 조직을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TI)는 이 협약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세계의 반부패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어져왔다. 2000년 서울특별시에서의 청렴 서약제 (Integrity pacts) 도입, 제 11차 반부패국제회의의 서울 개최, 2003년 5월 반부패 글로벌 포럼 (Global Forum) 개최, 2003년 UN의 ‘제 1회 공공 서비스 상 (Public Service Award) 수상 그리고 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방지위원회 (현재는 국가청렴위원회³⁾)가 설치되었다.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뇌물이 사회적 거래비용(Social Transaction Cost)을 낮춤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커지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면 부패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왜곡시키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며,⁴⁾ 특히 공무원의 부패는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공무원의 부패문제는 대한민국 헌정 5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사회적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패에 대한 대책도 인류가 위계적 사회질서를 이룬 세월만큼, 즉 국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명분과 구호 아래 공직 사회의 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근본적인 부패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부패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다루었던 이슈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이다. ‘노무현 정부’ 또한 규제개혁 및 반부패시스템의 도입과 정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는 국가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⁵⁾

2)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2006. p.21.

3)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패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2년 1월 25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4) 김규현, 『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p.1-2.

5)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승관, 『지방공무원의 부패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 지방공무원의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임무에 태만하거나 공직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국제관계에서는 거래질서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 상거래 제도의 권위를 깨뜨리고 국가의 대외신임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쳐,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공직수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렴도 인식수준 등과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토대로 공무원 부정부패와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제투명성기구와 TI CPI의 원천자료를 제공하는 기구들의 부패인식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대검찰청은 1999년부터 전국 각급감사기관(검찰, 경찰, 특사)에서 범죄사건을 감사하면서 작성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범죄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범죄현황 분석에서 일반적 범죄와 함께 여성범죄, 청소년범죄, 학생범죄, 전과자범죄, 정신장애범죄와 함께 공무원범죄를 따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부패행위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의미하는 청렴도와 ‘우리나라 부패현황 및 부패방지 정책 등 부패와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사업’을 의미하는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각각 2002년과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

연구과제 1 :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의 동향에 대해 파악한다.

연구과제 2 :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연구과제 3 :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와 부패인식지수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한다.

본 연구를 위한 관련 논문은 한정적이므로 CPI 원천자료 제공 기관들의 홈페이지와 발행 서적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리포트와 내부 자료, 대검찰청범죄분석 자료 등을 반영하였다 .

부패유형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을 참조할 것.

II. 공직부패의 개념과 원인

1. 공직부패의 개념

공직부패에 대해서는 부패를 범위에 따라 최광의의 부패, 광의의 부패, 협의의 부패, 그리고 최협의의 부패로 나눌 수 있다.⁶⁾

최광의의 부패란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권위를 오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즉, 사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내부규칙에 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최광의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며, 반드시 불법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부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광의의 부패는 최광의의 부패 중에서 공무원의 행위만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므로 직무를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시의 과실로 인하여 불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협의의 부패는 광의의 부패개념 중 공무원의 직무의무를 위반한 행위만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형벌법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행정법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최협의의 부패란 협의의 부패개념 중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범죄행위만을 의미한다. 범죄행위는 형법상의 직무범죄에 한하지 않고, 특별형법상의 직무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최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논의의 초점이 대개 개인에게 귀착되어, 부패자체가 아니라 부패행위를 한 ‘부패한 개인’에게 초점이 모아진다. 이러한 시각은 인식 범위를 좁힘에 따라서 부패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논의도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직부패를 개인적인 측면과 구조성 및 체제성의 문제를 동시에 이해해야하므로⁷⁾ 광의의 부패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공직부패의 원인

해방이후 인위적으로 도입된 자본주의 사회체제와 정부를 중심으로 한 무리한 경제성장정책은 권력과 기업간의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부패행위가 진행되었다. 개발정책에 따라 정치인과 관료에게 허용된 필요 이상의 재량권 한은 거의 모든 행정부문에 부패의 소지를 제공하였으며, 이것은 다시 민간의 부패로

6) 김해동, “관료부패에 관한 이론(I)”,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1972, p.717.

7) 부패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인식지수는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직부패의 개인적 측면, 구조성과 체제성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어져 사회의 전 영역에서 부패가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의 부패가 개발연대에 형성된 정부 주도적 자원배분 정책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규제나 특례가 고비용 저효율적인 정치구조와 맞물리면서 부패고리를 형성하고, 여기에 연고주의, 접대문화 등 부패친화적인 관행과 의식이 부패의 온상구실을 하면서 사회전반에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부패가 특정분야에 집중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⁸⁾

사회현상으로서의 부정부패는 모든 정부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의 문화·역사·정치·경제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급진적 정치·사회적 변동이론의 차원에서 군사·문화적 역기능의 현상인 권위주의 정권의 창출과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 발생요인을 포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개개인의 성격, 윤리관 및 생활태도, 담당한 업무의 특성,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성격과 분위기, 재량의 범위, 업무감독의 체제와 정도 등 부패의 원인도 다양하다.⁹⁾ 이러한 공직부패의 원인은 인적, 문화적, 경제적, 제도적, 통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¹⁰⁾

III. 공무원 범죄의 동향

본 장은 대검찰청범죄분석보고서(2000년-2006년)를 토대로 1999년에서 2005년까지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사경)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의 재입력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형법 죄명중 절도, 장물, 강도, 약취와유인, 체포와 감금, 통화, 직무유기, 직권남용에는 특별법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해당범죄를, 사기, 횡령, 배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해당범죄를, 손괴,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해당범죄를, 강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다만, 동법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위반 제외)을 포함시켰다. 그밖에 수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해당범죄(동법 제2조, 제3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해당범죄(동법 제5조, 제7조)를, 증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해당범죄(동법 제6조)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특별법범은 발생빈도가 많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일반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8) 최정학, 『공공부패의 법적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p.25.

9) 김용세,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사회과학논문집, 제17권 제2호, 대전대학교, 1998, p.12.

10) 부패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체계적·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는 입장도 있다(김왕수, “한국사회의 부패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발전연구, 제4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8, 10면 이하).

있는 법률을 선정하였다.¹¹⁾

1. 공무원 범죄발생 건수에 대한 동향 분석

<표 1> 형법범과 특별법범

|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형 법 범 | 4,189 | 2,710 | 2,825 | 3,876 | 4,441 | 4,134 | 3,893 |
| 특별법범 | 8,500 | 7,446 | 6,831 | 5,180 | 4,932 | 6,208 | 5,449 |
| 계 | 12,689 | 10,156 | 9,656 | 9,056 | 9,373 | 10,342 | 9,342 |

<표 1>은 대검찰청범죄분석보고서에 나타난 공무원의 연도별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숫자이다. 특별법범의 숫자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형법범은 2000년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2년을 기점으로 공무원의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숫자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공무원의 범죄자가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형법범

|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재산범죄 | 675 | 454 | 442 | 349 | 370 | 464 | 566 |
| 강력범죄(흉악) | 40 | 50 | 52 | 73 | 85 | 94 | 72 |
| 강력범죄(폭력) | 327 | 296 | 280 | 1,547 | 1,495 | 1,613 | 1,557 |
| 위조범죄 | 934 | 463 | 408 | 357 | 310 | 315 | 350 |
| 공무원범죄 | 1,497 | 859 | 939 | 796 | 774 | 656 | 787 |
| 풍속범죄 | 257 | 230 | 249 | 214 | 162 | 254 | 165 |
| 과실범죄 | 120 | 79 | 74 | 53 | 74 | 79 | 54 |
| 기타형법범죄 | 339 | 279 | 381 | 442 | 1,171 | 659 | 342 |
| 계 | 4,189 | 2,710 | 2,825 | 3,831 | 4,441 | 4,134 | 3,893 |

<표 2>는 대검찰청범죄분석보고서에 나타난 공무원의 연도별 형법범에 대한 죄명별 분류이다.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는 1999년 675명에서 2002년 349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7년간 사기(1,621), 횡령(581), 절도(436), 배임(432), 손괴(290) 순으로 많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강력범죄¹²⁾는 강력범죄(흉악)와 강력범죄(폭력)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력범죄(흉악)는 7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466명 이었으며, 그 중에서 강간이 394명으로 가장 많은

11) 형법과 특별법 죄명의 분류, 설명, 법적 근거 등은 본 연구의 연구기간인 2000년에서 2006년 (보고서의 내용은 1999년에서 2005년)까지의 내용에 한하며, 강력범죄를 제외한 형법은 7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특별법의 죄명은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12) 강력범죄(폭력)은 약취와 유인,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대해 1999년에서 2001년까지의 데이터가 없어 해당 발생명수는 0으로 처리하였다.

발생빈도를 보였으며, 강력범죄(폭력)는 7년간 거의 큰 변화가 없이 7,115이었고 그 중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5,030명, 상해가 1,3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조범죄는 7년간 총 3,137명으로 1999년 934명에서 2005년 350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문서위조범죄가 7년간 3,12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공무원범죄는 7년간 총 6,308명으로 1999년 1,497명에서 2005년 787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직무유기가 2,951명, 직권남용이 1,616명, 수뢰가 1,592명, 증뢰가 149명으로 분석되었다. 풍속범죄는 7년간 1,531명으로 1999년 257명에서 2003년 16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 254명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도박과 복표가 2004년에 160명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며, 간통이 7년간 총 469명으로 도박과 복표 다음의 숫자를 보여준다. 과실범죄는 7년간 총 533명이었으며 1999년 120명에서 2005년 54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이 43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과실치사상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발생명수가 미미하여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형법범죄는 7년간 총 3,613건이 발생하였는데 2003년에 1171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이유는 그 해에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범죄의 발생건수가 갑자기 증가(759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명예가 701건, 공무방해가 7년간 5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특별법범(1~10순위)¹³⁾

|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3,428 | 2,986 | 2,654 | 2,269 | 2,121 | 2,658 | 2,399 |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000-2005) | 0 | 1,599 | 1,425 | 1,681 | 1,716 | 2,179 | 1,556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9-2001) | 1,473 | 1,442 | 1,481 | 0 | 0 | 0 | 0 |
| 기타 | 649 | 251 | 159 | 232 | 467 | 525 | 803 |
| 도로교통법 | 2,346 | 75 | 128 | 139 | 93 | 141 | 110 |
| 대마관리법 | 0 | 481 | 328 | 166 | 135 | 185 | 179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270 | 258 | 249 | 109 | 99 | 119 | 91 |
| 공산품품질관리법 | 0 | 0 | 0 | 215 | 9 | 132 | 34 |
| 자동차관리법 | 45 | 50 | 88 | 61 | 30 | 19 | 40 |
| 윤락행위등방지법 | 23 | 16 | 24 | 24 | 38 | 35 | 28 |

<표 3>은 발생빈도가 많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일반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로 선정된 특별법범에 관한 것으로, 제시된 범죄 분류 중에는 없어진 것이 있으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초기에는 없었으나 나중에 생겨난 분류(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 공산품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7년간의 주요 특별법범의 분류에서 도로 혹은 교통과 관련한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다음

13) 1999년에서 2005년까지 7년간 범죄에 대한 명칭과 분류가 바뀌었으며, 총 80가지의 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한 10가지 범죄만을 제시하였다.

으로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공무원범죄¹⁴⁾

|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직무유기 | 696 | 408 | 444 | 305 | 349 | 304 | 445 |
| 직권남용 | 219 | 223 | 251 | 257 | 296 | 196 | 174 |
| 수 회 | 522 | 210 | 225 | 212 | 123 | 141 | 159 |
| 증 회 | 60 | 18 | 19 | 22 | 6 | 15 | 9 |
| 계 | 1,497 | 859 | 939 | 796 | 774 | 656 | 787 |

<표 4>는 최협의의 의미에서의 공무원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관한 표이다. 7년간 총 6,30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직무유기가 2,951건으로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보였으며, 직권남용이 2,951건, 수뢰가 1,592건, 증뢰가 149건으로 나타났다.

2. 공무원 범죄자의 범행동기에 대한 동향분석

<표 5> 범행동기(이유)

| 년 도 | 계 | | 소계 | 생활비 마련 | 유혹비 마련 | 도박비 마련 | 허영 사치심 | 치부 | 기타 |
|--------|--------|-------|-----|-----------|-----------|-----------|-----------|----|-----|
| 1999년 | 12,689 | | 905 | 93 | 12 | 7 | 15 | 74 | 704 |
| | 형법범 | 4,189 | 694 | 64 | 12 | 7 | 14 | 45 | 552 |
| | 특별법범 | 8,500 | 211 | 29 | 0 | 0 | 1 | 29 | 152 |
| 2000년 | 10,156 | | 540 | 29 | 4 | 3 | 2 | 48 | 454 |
| | 형법범 | 2,710 | 417 | 22 | 4 | 3 | 2 | 41 | 345 |
| | 특별법범 | 7,446 | 123 | 7 | 0 | 0 | 0 | 7 | 109 |
| 20001년 | 9,656 | | 587 | 53 | 4 | 1 | 3 | 34 | 492 |
| | 형법범 | 2,825 | 386 | 35 | 3 | 1 | 3 | 26 | 318 |
| | 특별법범 | 6,831 | 201 | 18 | 1 | 0 | 0 | 8 | 174 |
| 2002년 | 9,056 | | 487 | 24 | 1 | 5 | 6 | 25 | 426 |
| | 형법범 | 3,876 | 341 | 18 | 1 | 5 | 6 | 22 | 289 |
| | 특별법범 | 5,180 | 146 | 6 | 0 | 0 | 0 | 3 | 137 |
| 2003년 | 9,373 | | 587 | 29 | 1 | 2 | 3 | 29 | 523 |
| | 형법범 | 4,441 | 445 | 22 | 1 | 2 | 2 | 28 | 390 |
| | 특별법범 | 4,932 | 142 | 7 | 0 | 0 | 1 | 1 | 133 |
| 2004년 | 10,342 | | 98 | 32 | 5 | 7 | 1 | 16 | 37 |
| | 형법범 | 4,134 | 74 | 25 | 5 | 6 | 1 | 15 | 22 |
| | 특별법범 | 6,208 | 24 | 7 | 0 | 1 | 0 | 1 | 15 |
| 2005년 | 9,342 | | 93 | 42 | 9 | 6 | 2 | 19 | 15 |
| | 형법범 | 3,893 | 55 | 35 | 8 | 0 | 0 | 9 | 3 |
| | 특별법범 | 5,449 | 38 | 7 | 1 | 6 | 2 | 10 | 12 |

14) 공무원의 고유한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말한다. 위에서 제시한 최협의의 의미에서의 범죄를 말한다.

<표 6> 범행동기 2

| 년 도 | | 사행 심 | 보복 | 가정 불화 | 호기 심 | 유혹 | 우발 적 | 현실 불만 | 부주 의 | 기타 | 미상 |
|-------|------|---------|----|----------|---------|----|---------|----------|---------|-------|-------|
| 1999년 | 계 | 67 | 25 | 90 | 27 | 59 | 1,238 | 73 | 5,135 | 4,672 | 398 |
| | 형법범 | 65 | 9 | 23 | 9 | 34 | 228 | 26 | 307 | 2,536 | 258 |
| | 특별법범 | 2 | 16 | 67 | 18 | 25 | 1,010 | 47 | 4,828 | 2,136 | 140 |
| 2000년 | 계 | 55 | 12 | 77 | 14 | 32 | 1,178 | 60 | 4,341 | 3,587 | 260 |
| | 형법범 | 55 | 2 | 20 | 3 | 16 | 225 | 20 | 202 | 1,579 | 171 |
| | 특별법범 | 0 | 10 | 57 | 11 | 16 | 953 | 40 | 4139 | 2,008 | 89 |
| 2001년 | 계 | 40 | 17 | 104 | 20 | 46 | 1,210 | 50 | 3572 | 3,608 | 402 |
| | 형법범 | 40 | 5 | 26 | 7 | 22 | 237 | 11 | 171 | 1,661 | 259 |
| | 특별법범 | 0 | 12 | 78 | 13 | 24 | 973 | 39 | 3401 | 1,947 | 143 |
| 2002년 | 계 | 44 | 11 | 78 | 19 | 33 | 1,034 | 165 | 3075 | 3,745 | 365 |
| | 형법범 | 43 | 10 | 76 | 11 | 18 | 879 | 120 | 178 | 1,906 | 294 |
| | 특별법범 | 1 | 1 | 2 | 8 | 15 | 155 | 45 | 2897 | 1,839 | 71 |
| 2003년 | 계 | 49 | 13 | 63 | 22 | 53 | 981 | 397 | 2897 | 3,979 | 333 |
| | 형법범 | 49 | 5 | 63 | 10 | 25 | 830 | 334 | 160 | 2,256 | 264 |
| | 특별법범 | 0 | 7 | 0 | 12 | 28 | 151 | 63 | 2737 | 1,723 | 69 |
| 2004년 | 계 | 89 | 25 | 97 | 19 | 58 | 1,488 | 285 | 2787 | 3,912 | 1,484 |
| | 형법범계 | 80 | 14 | 91 | 6 | 27 | 1,212 | 164 | 90 | 1,607 | 769 |
| | 특별법범 | 9 | 11 | 6 | 13 | 31 | 276 | 121 | 2697 | 2,305 | 715 |
| 2005년 | 계 | 47 | 14 | 64 | 28 | 39 | 1,173 | 192 | 2102 | 3,688 | 1,902 |
| | 형법범계 | 43 | 9 | 63 | 14 | 20 | 964 | 33 | 121 | 1,522 | 1,049 |
| | 특별법범 | 4 | 5 | 1 | 14 | 19 | 209 | 159 | 1981 | 2,166 | 853 |

<표 5>와 <표 6>은 7년간의 공무원의 범죄자의 범행동기에 관한 것이다. <표 5>에서 범행동기 중에서 이욕은 1999년에 905건에서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 98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생활비 마련을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형법범과 특별법범에 따라서도 이용에 관련된 6가지 모든 문항에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부주의, 기타, 우발적 순으로 범행동기가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미상인 범행동기는 상대적으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형법범과 특별법범에 따라서 각 세부항목에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범행동기가 미상인 경우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연도별 재산범죄와 범행동기에 대한 표이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4년부터 재산범죄와 관련한 범행동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욕과 관련한 범행동기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행심과 관련한 범행동기가 발생빈도가 비록 적지만 2004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타와 미상인 범행동기가 최근에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연도별 재산범죄와 범행동기

| 구 분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계 | | 675 | 454 | 442 | 394 | 370 | 464 | 466 |
| 이 목 | 소 계 | 215 | 131 | 117 | 110 | 132 | 35 | 28 |
| | 생활비마련 | 26 | 9 | 15 | 8 | 11 | 15 | 21 |
| | 유형비마련 | 3 | 2 | 3 | 0 | 0 | 2 | 3 |
| | 도박비마련 | 0 | 0 | 0 | 0 | 0 | 5 | 0 |
| | 허영사치심 | 3 | 1 | 2 | 2 | 1 | 1 | 0 |
| | 치부 | 10 | 6 | 10 | 9 | 9 | 8 | 4 |
| | 기타 | 173 | 113 | 87 | 91 | 111 | 4 | 0 |
| 사행심 | | 6 | 2 | 4 | 6 | 6 | 10 | 3 |
| 보복 | | 2 | 0 | 0 | 1 | 0 | 0 | 0 |
| 가정불화 | | 1 | 0 | 2 | 1 | 3 | 3 | 1 |
| 호기심 | | 0 | 2 | 1 | 5 | 1 | 0 | 6 |
| 유혹 | | 2 | 0 | 1 | 2 | 1 | 2 | 4 |
| 우발적 | | 14 | 20 | 20 | 15 | 22 | 45 | 28 |
| 현실불만 | | 0 | 3 | 0 | 2 | 1 | 3 | 0 |
| 부주의 | | 40 | 25 | 22 | 9 | 20 | 12 | 24 |
| 기타 | | 379 | 260 | 252 | 225 | 172 | 252 | 330 |
| 미상 | | 16 | 11 | 23 | 18 | 12 | 102 | 42 |

<표 8> 연도별 강력범죄와 범행동기

| 구 분 | | 1999 년 | 2000 년 | 2001 년 | 2002년 | | 2003년 | | 2004년 | | 2005년 | |
|--------|-------|-----------|-----------|-----------|-------|-------|-------|-------|-------|-------|-------|-------|
| | | | | | 흉악 | 폭력 | 흉악 | 폭력 | 흉악 | 폭력 | 흉악 | 폭력 |
| 계 | | 367 | 346 | 332 | 73 | 1,547 | 85 | 1,495 | 94 | 1,613 | 72 | 1,557 |
| 이 목 | 소 계 | 10 | 15 | 7 | 3 | 43 | 4 | 52 | 1 | 3 | 0 | 0 |
| | 생활비마련 | 3 | 2 | 1 | 1 | 3 | 0 | 4 | 1 | 0 | 0 | 0 |
| | 유형비마련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 | 도박비마련 | 0 | 0 | 0 | 1 | 0 | 0 | 1 | 0 | 0 | 0 | 0 |
| | 허영사치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치부 | 0 | 0 | 0 | 0 | 0 | 0 | 2 | 0 | 1 | 0 | 0 |
| | 기타 | 7 | 13 | 6 | 1 | 40 | 4 | 44 | 0 | 2 | 0 | 0 |
| 사행심 |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2 |
| 보복 | | 2 | 2 | 1 | 2 | 4 | 0 | 5 | 2 | 7 | 0 | 5 |
| 가정불화 | | 17 | 12 | 19 | 1 | 72 | 0 | 53 | 0 | 78 | 1 | 56 |
| 호기심 | | 3 | 0 | 1 | 3 | 0 | 3 | 0 | 1 | 0 | 3 | 1 |
| 유혹 | | 2 | 1 | 0 | 5 | 1 | 6 | 2 | 2 | 3 | 2 | 7 |
| 우발적 | | 174 | 162 | 160 | 27 | 783 | 31 | 701 | 38 | 922 | 23 | 831 |
| 현실불만 | | 13 | 9 | 3 | 0 | 33 | 0 | 20 | 1 | 27 | 0 | 25 |
| 부주의 | | 6 | 6 | 9 | 0 | 40 | 1 | 19 | 1 | 11 | 0 | 15 |
| 기타 | | 129 | 135 | 123 | 32 | 530 | 39 | 619 | 29 | 355 | 22 | 317 |
| 미상 | | 11 | 4 | 9 | 0 | 41 | 1 | 24 | 19 | 205 | 21 | 298 |

<표 8>은 연도별 강력범죄와 범행동기에 대한 것이다. 7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육에 관련한 범죄가 비교적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육과 관련한 범죄 중에서 기타로 분류된 범죄가 200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갑자기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발적 동기에 의한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혹은 미상으로 분류된 강력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연도별 위조범죄와 범행동기

| 구 분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계 | | 934 | 463 | 408 | 357 | 310 | 315 | 350 |
| 이 육 | 소 계 | 97 | 68 | 66 | 21 | 43 | 2 | 7 |
| | 생활비마련 | 6 | 4 | 4 | 5 | 2 | 1 | 2 |
| | 유형비마련 | 0 | 0 | 0 | 1 | 0 | 0 | 4 |
| | 도박비마련 | 0 | 0 | 0 | 2 | 0 | 0 | 0 |
| | 허영사치심 | 0 | 1 | 0 | 0 | 0 | 0 | 0 |
| | 치 부 | 3 | 1 | 2 | 1 | 2 | 0 | 1 |
| | 기 타 | 88 | 62 | 60 | 12 | 39 | 1 | 0 |
| 사행심 | | 8 | 2 | 0 | 1 | 1 | 0 | 0 |
| 보복 | | 0 | 0 | 0 | 0 | 0 | 0 | 2 |
| 가정불화 | | 0 | 0 | 0 | 0 | 0 | 0 | 0 |
| 호기심 | | 0 | 0 | 0 | 0 | 0 | 0 | 0 |
| 유혹 | | 3 | 0 | 2 | 1 | 3 | 0 | 0 |
| 우발적 | | 3 | 0 | 5 | 0 | 2 | 1 | 3 |
| 현실불만 | | 0 | 0 | 0 | 0 | 0 | 1 | 1 |
| 부주의 | | 83 | 43 | 24 | 35 | 13 | 10 | 16 |
| 기타 | | 708 | 304 | 276 | 260 | 214 | 217 | 233 |
| 미상 | | 32 | 46 | 35 | 39 | 34 | 84 | 88 |

<표 9>는 연도별 위조범죄와 범행동기에 관한 표이다. 전반적으로 위조와 관련한 범죄는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기타로 분류된 범행동기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범행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상으로 분류된 범행동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은 연도별 공무원범죄와 범행동기에 관한 표이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범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기타로 분류된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미상으로 분류된 범행동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연도별 공무원범죄와 범행동기

| 구 분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계 | | 1,497 | 859 | 827 | 796 | 696 | 656 | 787 |
| 이 유 | 소 계 | 314 | 142 | 112 | 87 | 64 | 22 | 16 |
| | 생활비마련 | 26 | 7 | 9 | 0 | 3 | 6 | 12 |
| | 유혹비마련 | 4 | 1 | 0 | 0 | 0 | 1 | 1 |
| | 도박비마련 | 0 | 0 | 0 | 0 | 0 | 0 | 0 |
| | 허영사치심 | 4 | 0 | 0 | 3 | 1 | 0 | 0 |
| | 치부 | 31 | 26 | 7 | 10 | 9 | 4 | 3 |
| | 기타 | 249 | 108 | 96 | 74 | 51 | 11 | 0 |
| 사행심 | | 2 | 3 | 0 | 3 | 0 | 2 | 2 |
| 보복 | | 0 | 0 | 0 | 0 | 0 | 4 | 0 |
| 가정불화 | | 0 | 0 | 0 | 0 | 0 | 0 | 0 |
| 호기심 | | 1 | 0 | 0 | 0 | 0 | 0 | 0 |
| 유혹 | | 11 | 7 | 5 | 4 | 8 | 11 | 3 |
| 우발적 | | 9 | 5 | 4 | 21 | 22 | 2 | 14 |
| 현실불만 | | 1 | 0 | 7 | 3 | 0 | 0 | 0 |
| 부주의 | | 91 | 64 | 54 | 47 | 41 | 14 | 38 |
| 기타 | | 904 | 547 | 527 | 470 | 467 | 366 | 374 |
| 미상 | | 164 | 91 | 118 | 161 | 94 | 235 | 340 |

<표 11> 연도별 풍속범죄와 범행동기

| 구 분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계 | | 317 | 230 | 249 | 214 | 162 | 254 | 165 |
| 이 유 | 소 계 | 41 | 31 | 42 | 43 | 24 | 3 | 0 |
| | 생활비마련 | 0 | 0 | 1 | 0 | 0 | 0 | 0 |
| | 유혹비마련 | 5 | 1 | 0 | 0 | 0 | 1 | 0 |
| | 도박비마련 | 7 | 3 | 1 | 2 | 1 | 1 | 0 |
| | 허영사치심 | 7 | 0 | 0 | 1 | 0 | 0 | 0 |
| | 치부 | 1 | 8 | 7 | 2 | 5 | 1 | 0 |
| | 기타 | 21 | 19 | 33 | 38 | 18 | 0 | 0 |
| 사행심 | | 49 | 47 | 34 | 32 | 41 | 63 | 35 |
| 보복 | | 2 | 0 | 0 | 0 | 0 | 0 | 0 |
| 가정불화 | | 4 | 7 | 3 | 2 | 6 | 10 | 3 |
| 호기심 | | 5 | 1 | 2 | 3 | 5 | 4 | 4 |
| 유혹 | | 16 | 8 | 5 | 5 | 5 | 8 | 4 |
| 우발적 | | 5 | 12 | 8 | 2 | 7 | 19 | 10 |
| 현실불만 | | 0 | 2 | 0 | 0 | 0 | 1 | 0 |
| 부주의 | | 12 | 9 | 2 | 3 | 3 | 1 | 2 |
| 기타 | | 112 | 109 | 146 | 115 | 69 | 113 | 72 |
| 미상 | | 71 | 4 | 7 | 9 | 2 | 32 | 35 |

<표 11>은 연도별 풍속범죄와 범행동기에 관한 표이다. 전반적으로 풍속범죄와 관련한 범행동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행심과 기타로 분류된 범행동기가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상으로 분류된 범행동기도 풍속범죄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2> 연도별 과실범죄와 범행동기

| 구 분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계 | | 120 | 79 | 74 | 53 | 74 | 79 | 54 |
| 이 목 | 소계 | 1 | 1 | 2 | 0 | 1 | 0 | 0 |
| | 생활비마련 | 0 | 0 | 0 | 0 | 0 | 0 | 0 |
| | 유형비마련 | 0 | 0 | 0 | 0 | 0 | 0 | 0 |
| | 도박비마련 | 0 | 0 | 0 | 0 | 0 | 0 | 0 |
| | 허영사치심 | 0 | 0 | 0 | 0 | 0 | 0 | 0 |
| | 치부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 | 1 | 1 | 2 | 0 | 1 | 0 | 0 |
| 사행심 | | 0 | 0 | 0 | 0 | 0 | 0 | 0 |
| 보복 | | 0 | 0 | 0 | 0 | 0 | 0 | 0 |
| 가정불화 | | 0 | 0 | 1 | 0 | 0 | 0 | 0 |
| 호기심 | | 0 | 0 | 0 | 0 | 0 | 0 | 0 |
| 유혹 | | 0 | 0 | 0 | 0 | 0 | 0 | 0 |
| 우발적 | | 1 | 0 | 1 | 0 | 0 | 11 | 2 |
| 현실불만 | | 0 | 0 | 0 | 1 | 0 | 0 | 0 |
| 부주의 | | 62 | 40 | 40 | 31 | 28 | 34 | 23 |
| 기타 | | 50 | 37 | 28 | 21 | 40 | 27 | 19 |
| 미상 | | 6 | 1 | 2 | 0 | 5 | 7 | 10 |

<표 12>는 연도별 과실범죄와 범행동기에 관한 표이다. 전반적으로 200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 2005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목과 관련한 범행동기는 거의 없었으며, 부주의, 기타, 미상으로 분류된 범행동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주의와 기타로 분류된 범행동기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였고, 미상으로 분류된 범행동기가 과실범조와 관련하여 소수이지만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은 연도별 기타형법범죄와 범행동기에 관한 표이다. 전반적으로 2003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4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로 분류된 범행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상으로 분류된 범행동기

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연도별 기타형법범죄와 범행동기

| 구 분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계 | | 339 | 279 | 381 | 442 | 1171 | 659 | 342 |
| 이 목 | 소계 | 16 | 29 | 40 | 34 | 125 | 8 | 4 |
| | 생활비마련 | 3 | 0 | 5 | 1 | 2 | 2 | 0 |
| | 유형비마련 | 0 | 0 | 0 | 0 | 0 | 1 | 0 |
| | 도박비마련 | 0 | 0 | 0 | 0 | 0 | 0 | 0 |
| | 허영사치심 | 0 | 0 | 1 | 0 | 0 | 0 | 0 |
| | 치부 | 0 | 0 | 0 | 0 | 1 | 1 | 1 |
| | 기타 | 13 | 29 | 34 | 33 | 122 | 4 | 3 |
| 사행심 | | 0 | 1 | 0 | 1 | 1 | 3 | 1 |
| 보복 | | 3 | 0 | 3 | 3 | 0 | 1 | 2 |
| 가정불화 | | 1 | 1 | 1 | 0 | 1 | 0 | 2 |
| 호기심 | | 0 | 0 | 0 | 0 | 1 | 1 | 0 |
| 유혹 | | 0 | 0 | 0 | 0 | 0 | 1 | 0 |
| 우발적 | | 22 | 26 | 29 | 31 | 45 | 174 | 53 |
| 현실불만 | | 12 | 6 | 8 | 81 | 313 | 131 | 7 |
| 부주의 | | 13 | 15 | 28 | 13 | 35 | 7 | 3 |
| 기타 | | 254 | 187 | 240 | 253 | 636 | 248 | 155 |
| 미상 | | 18 | 14 | 32 | 26 | 14 | 85 | 115 |

IV. 공무원 부패에 대한 인식

1. 한국청렴위원회의 부패인식지수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2003년 (64.6%) 대비 8.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는 ‘부패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2003년: 7.7% —> 2006년 11월: 2.6%).

“현재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을 1년전과 비교하면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은 1년전과 비교한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에 대해 ‘감소’가 22.1%(매우 감소: 3.0% + 다소 감소: 19.1%), ‘증가’가 22.0%(매우 증가: 7.1% + 다소 증가: 14.9%)로 나타났고(비슷: 47.7%, 잘 모름: 8.2%), 공무원은 ‘감소’가 67.0%(매우 감소: 23.4% + 다소 감소: 43.6%), ‘증가’가 1.0%(매우 증가: 0.3% + 다소 증가: 0.7%)로 나타났다(비슷: 21.6%, 잘 모름: 4.9%).

<표 14>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 행정기능 분야 | 일반국민 (%) | | | | 공무원 (%) | | |
|---------------------|----------|---------|---------|---------|---------|---------|---------|
| | '03. 9월 | '04. 9월 | '05. 9월 | '06. 7월 | '04. 9월 | '05. 9월 | '06. 7월 |
| 건축·건설·주택·토지 | 72.6 | 71.3 | 73.9 | 71.7 | 49.1 | 31.7 | 42.6 |
|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 57 | 46.0 | 52.6 | 53.6 | 35.7 | 26.9 | 38 |
| 세무 | 58.1 | 59.4 | 54 | 49.9 | 34.4 | 23.3 | 28.1 |
| 경찰 | 51.3 | 54.9 | 48 | 44.9 | 34.6 | 25.3 | 29.9 |
| 병무·국방 | 54.6 | 51.9 | 52.3 | 42.4 | 32.6 | 14.1 | 19.7 |
| 교육 | 45.1 | 45.1 | 48.9 | 40.4 | 25.7 | 21 | 21.3 |
| 보건·위생·의료 | 32.2 | 47.3 | 33.4 | 29.2 | 21.6 | 14.1 | 15.6 |
| 환경 | 32 | 37.9 | 32.7 | 28.1 | 10.3 | 9.4 | 9.7 |
| 조달 | 27.4 | 36.1 | 26 | 23.1 | 8.7 | 9.1 | 11.4 |
| 소방 | 9.4 | 11.3 | 7.8 | 11.4 | 8.6 | 6.1 | 9 |

“귀하가 그동안 느끼거나 경험하셨던 일에 비추어 볼 때, 다음 행정기능 분야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표 14>와 같이 응답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사회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우리사회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가 2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20.4%), ‘개인의 윤리의식부족’(17.9%), ‘구조화된 부패문화’(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은 ‘개인의 윤리의식부족’이 2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25.6%), ‘구조화된 부패문화’(24.6%),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⁵⁾

2.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2.1 조사방법 및 조사도구

다음의 연구결과는 2007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연구결과이다. 조사대상은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및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직업 구분 없이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고, 연구의 취지, 목적, 설문지 취득요령을 교육받은 4명의 설문 조사자들로 하여금 관공서나 공공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설문 취지를 설명하고 직접 작성(자기평가기입법)하도록 한 뒤 회수하였다.

15) 국가청렴위원회(www.kicac.go.kr)

2.2 조사대상

<표 15>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구 분 | | 사례수(N) | 퍼센트(%) | 구 분 | | 사례수(N) | 퍼센트(%) |
|-----|-------------|--------|--------|-----|-------|--------|--------|
| 연령 | 20-29세 | 68 | 23.9 | 직업 | 주부 | 58 | 20.4 |
| | 30-39세 | 87 | 30.6 | | 자영업 | 92 | 32.4 |
| | 40-49세 | 77 | 27.1 | | 학생 | 53 | 18.7 |
| | 50세 이상 | 52 | 18.4 | | 기타 | 35 | 12.3 |
| | Total | 284 | 100.0 | | 무직 | 14 | 4.9 |
| 학력 | 고졸이하 | 105 | 37.0 | | 공무원 | 32 | 11.3 |
| | 대학 및 대학원 재학 | 44 | 15.5 | 성별 | Total | 284 | 100.0 |
| | 대학 및 대학원 졸업 | 135 | 47.5 | | 남자 | 145 | 51.1 |
| | Total | 284 | 100.0 | | 여자 | 139 | 48.9 |
| | | | | | Total | 284 | 100.0 |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 15>와 같다. 총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성실도와 충실도를 고려하여 16부를 제외한 284부를 분석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29세가 68명(23.9%), 30-39세가 87명(30.6%), 40-49세가 77명(27.1%), 50세 이상이 52명(18.3%)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가 105명(37.0%), 대학 및 대학원 재학이 44명(15.5%),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이 135명(47.5%)로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자영업이 92명(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부(20.4%), 학생(18.7%)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145명(51.1%), 여자가 139명(48.9%)로 나타났다.

2.3 조사도구

<표 16> 설문지의 구성

| 문 항 | 세부분항 | 문항수 |
|------------|---|------|
| 부패실태 | 부패만연정도, 부패인식, 부패감소정도, 부패감소이유, 부패소재, 기관별부패정도, 부패방지대책의 효과 | 13문항 |
| 부패원인 및 역기능 | 부패의 원인 | 8문항 |
| | 부패의 역기능 | 6문항 |
| 개인적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 4문항 |
| 총 계 | | 31문항 |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정기섭(2005)의 "우리나라 부패에 관한 공공부문과 사부분간의 인식 비교 연구 - 지방자치 6급이하 공무원과 사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16>과 같다.

2.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구체적인 통계 처리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부패의 실태, 원인 및 역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및 평균값 분석을 실시하였다.

2.5 분석결과

위에서 제시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도구, 자료처리에 의한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부패의 만연정도

| 구 분 | 전혀 없다 | 거의 없다 | 약간 있다 | 많이 있다 | 매우 많이 있다 |
|--------|-------|-------|-------|-------|----------|
| 사례수(N) | 6 | 29 | 107 | 120 | 22 |
| 퍼센트(%) | 2.1 | 10.2 | 37.7 | 42.3 | 7.7 |

<표 17>은 부패가 사회에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분석결과 많이 있다가 120명(42.3%), 약간 있다가 107명(37.7%)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패가 만연하다(많이 있다+매우 많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부패에 대한 인식

| 구 분 | 문제가 될 게 없다 | 심하지만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 | 그리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한 문제가 된다 |
|--------|------------|-------------------|------------|------------|
| 사례수(N) | 4 | 20 | 87 | 173 |
| 퍼센트(%) | 1.4 | 7.1 | 30.6 | 60.9 |

<표 18>은 부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73명(60.9%)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도 87명(30.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19> 과거 2년 동안의 부패 변화 인식

| 구 분 | 전혀 줄지 않았다 | 거의 줄지 않았다 | 약간 줄었다 | 많이 줄은 편이다 | 매우 많이 줄었다 |
|--------|-----------|-----------|--------|-----------|-----------|
| 사례수(N) | 36 | 96 | 94 | 46 | 12 |
| 퍼센트(%) | 12.7 | 33.8 | 33.1 | 16.2 | 4.2 |

<표 19>는 과거 2년 동안 부패가 줄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거의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6명(33.8%)으로 나타났으며, 약간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94명(33.1%)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약간 줄었거나 거의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 6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부패가 줄어든 이유¹⁶⁾

| 구 분 | 무응답 | 부패 방지 대책의 효과 | 시민 의식 제고 | 공직자 윤리 의식강화 |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 | 기타 |
|--------|------|-----------------|-------------|----------------|------------------|-----|
| 사례수(N) | 60 | 30 | 76 | 36 | 77 | 5 |
| 퍼센트(%) | 21.1 | 10.6 | 26.8 | 12.7 | 27.1 | 1.8 |

<표 20>은 부패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부패가 줄어든 이유에 대한 응답이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가 77명(27.1%), 시민 의식 제고가 76명(26.8%), 무응답이 60명(21.1%)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 부패의 책임

| 구 분 | 사례수(N) | 퍼센트(%) |
|-------|--------|--------|
| 공직자 | 75 | 26.4 |
| 일반인 | 10 | 3.5 |
| 양자 모두 | 199 | 70.1 |
| Total | 284 | 100.0 |

<표 21>은 부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다.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9명(70.1%)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공직자가 75명(26.4%)로 나타났다.

<표 22>는 각 기관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이다. 부패했다고 응답한 비율(부패한 편이다+매우 부패했다)이 정부행정기관의 경우 53.5%, 경찰과 검찰은 60.6%, 종교단체가 46.1%, 시민단체가 27.5%, 언론기관이 54.9%, 구청 및 동사무소가 24.6%, 일반기업체가 42.9%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언론기관, 종교단체, 일반기업체의 부패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에 소속된 정부행정기관과 경찰/검찰의 부패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부패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문항이다.

<표 22> 각 기관들의 부패인식 수준

| 구 분 | |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 | 부패하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부패한 편이다 | 매우 부패했다 |
|-----------|-----|-------------|-------------|------|---------|---------|
| 정부행정기관 | 사례수 | 4 | 24 | 104 | 116 | 36 |
| | 퍼센트 | 1.4 | 8.5 | 36.6 | 40.8 | 12.7 |
| 경찰/검찰 | 사례수 | 4 | 21 | 87 | 134 | 38 |
| | 퍼센트 | 1.4 | 7.4 | 30.6 | 47.2 | 13.4 |
| 종교단체 | 사례수 | 8 | 43 | 102 | 92 | 39 |
| | 퍼센트 | 2.8 | 15.1 | 35.9 | 32.4 | 13.7 |
| 시민단체 | 사례수 | 3 | 63 | 140 | 61 | 17 |
| | 퍼센트 | 1.1 | 22.2 | 49.3 | 21.5 | 6.0 |
| 언론기관 | 사례수 | 2 | 20 | 106 | 117 | 39 |
| | 퍼센트 | 0.7 | 7 | 37.3 | 41.2 | 13.7 |
| 구청 및 동사무소 | 사례수 | 7 | 67 | 140 | 58 | 12 |
| | 퍼센트 | 2.5 | 23.6 | 49.3 | 20.4 | 4.2 |
| 일반기업체 | 사례수 | 4 | 35 | 123 | 104 | 18 |
| | 퍼센트 | 1.4 | 12.3 | 43.3 | 36.6 | 6.3 |

<표 23> 부패원인

| 구 분 | | 전혀 원인이 아님 | 거의 원인이 아님 | 거의 미미한 원인 | 중요한 원인 | 매우 중요한 원인 |
|------------------------|-----|-----------|-----------|-----------|--------|-----------|
| 개인의 공직의식 및 도덕성 결여 | 사례수 | 9 | 79 | 150 | 41 | 5 |
| | 퍼센트 | 3.2 | 27.8 | 52.8 | 14.4 | 1.8 |
| 불명확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 사례수 | 2 | 12 | 63 | 149 | 58 |
| | 퍼센트 | 0.7 | 4.2 | 22.2 | 52.5 | 20.4 |
|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각종 법 및 제도 | 사례수 | 3 | 6 | 84 | 151 | 40 |
| | 퍼센트 | 1.1 | 2.1 | 29.6 | 53.2 | 14.1 |
| 과도한 행정규제 | 사례수 | 1 | 11 | 72 | 153 | 47 |
| | 퍼센트 | 0.4 | 3.9 | 25.4 | 53.9 | 16.5 |
| 부패신고 및 고발제도의 미비 | 사례수 | 3 | 30 | 101 | 121 | 29 |
| | 퍼센트 | 1.1 | 10.6 | 35.6 | 42.6 | 10.2 |
| 배금주의 및 한탕주의 의식구조 | 사례수 | 9 | 36 | 103 | 105 | 31 |
| | 퍼센트 | 3.2 | 12.7 | 36.3 | 37 | 10.9 |
| 건전한 시민의식 부족 | 사례수 | 2 | 12 | 72 | 126 | 72 |
| | 퍼센트 | 0.7 | 4.2 | 25.4 | 44.4 | 25.4 |
| 부패에 대한 지나친 관용적 태도 | 사례수 | 3 | 17 | 95 | 123 | 46 |
| | 퍼센트 | 1.1 | 6 | 33.5 | 43.3 | 16.2 |

<표 23>은 8가지 부패원인에 응답결과이다. 개인의 공직의식 및 도덕성 결여 항목에서는 150명(52.8%)가 거의 미미한 원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7개 요인 모두 부패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부패의 역기능 정도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부패는 음성 자금화, 불로소득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 사례수 | 0 | 4 | 47 | 167 | 66 |
| | 퍼센트 | 0.0 | 1.4 | 16.5 | 58.8 | 23.2 |
| 부패는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행정 효율성을 저해한다 | 사례수 | 0 | 9 | 39 | 180 | 56 |
| | 퍼센트 | 0.0 | 3.2 | 13.7 | 63.4 | 19.7 |
| 부패는 공공 공사의 부실화와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 사례수 | 1 | 3 | 39 | 133 | 108 |
| | 퍼센트 | 0.4 | 1.1 | 13.7 | 46.8 | 38.0 |
| 부패는 근무평정제도 등 행정제도의 기능을 왜곡시켜 행정 작용을 약화시킨다 | 사례수 | 0 | 9 | 58 | 156 | 61 |
| | 퍼센트 | 0.0 | 3.2 | 20.4 | 54.9 | 21.5 |
| 부패는 황금만능주의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경제를 불안케 한다 | 사례수 | 0 | 12 | 36 | 158 | 78 |
| | 퍼센트 | 0.0 | 4.2 | 12.7 | 55.6 | 27.5 |
| 부패는 권력과 부가 야합하는 형태가 되므로 국민전체의 통합을 저해한다 | 사례수 | 0 | 7 | 46 | 139 | 92 |
| | 퍼센트 | 0.0 | 2.5 | 16.2 | 48.9 | 32.4 |

<표 24>는 부패의 역기능 정도에 대한 문항이다. 분석결과 모든 문항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나머지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적으로 80%에 달해 부패가 각 문항에 해당하는 사회문제를 크게 야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공무원 범죄 동향과 부패인식지수의 상관관계¹⁷⁾

<표 25>는 TI CPI 지수와 공무원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은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이용한 이변량 상관관계분석(bivariate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제투명성기구의 TI지수는 IMD의 부패인식지수와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 .891**)가 존재하고 특별법범의 발생빈도와는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IMD의 부패인식지수는 특별법범(상관계수 = -.795**)과 공무원범죄(상관계수 = -.807*)와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WEF의 부패인식지수는 형법범의 발생빈도 강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 .921*)가 존재하고 특별법범의 발생빈도와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ERC 부패인식지수는 특별법범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 .945*)가 존재하며, 특별법범과 공무원범죄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 .858*)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본 장에 포함된 부패인식지수는 TI CPI 원천자료 기관들 중에서 1999년에서 2005년까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였다.

<표 25> TI CPI 지수와 공무원 범죄¹⁸⁾와의 상관관계 1

| 구 분 | TI | IMD ¹⁹⁾ | WEF ²⁰⁾ | PERC ²¹⁾ | 형법범 | 특별법범 | 공무원 범죄자 |
|-------|----------|--------------------|--------------------|---------------------|-------|---------|------------|
| TI | . | . | . | . | . | . | . |
| IMD | .891(**) | | . | . | . | . | . |
| WEF | .428 | .248 | . | . | . | . | . |
| PERC | -.636 | -.694 | -.811 | . | . | . | . |
| 형법범 | .246 | .062 | .921(*) | -.507 | . | . | . |
| 특별법범 | -.766(*) | -.795(*) | -.943(*) | .945(**) | -.364 | . | . |
| 공무원범죄 | -.676 | -.807(*) | -.366 | .721 | .166 | .858(*) | . |

*p<.05, **p<.01

<표 26>은 TI CPI 지수와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국제적인 부패인식지수와 공무원 신분과 관련한 범죄발생 빈도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권남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신분범죄의 발생빈도 간에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TI CPI 지수와 공무원 범죄²²⁾와의 상관관계 2

| 구 분 | TI | IMD | WEF | PERC | 직무유기 | 직권남용 | 수뢰 | 증뢰 | 공무원 범죄 |
|-------|----------|-------|-------|-------|----------|-------|----------|----------|-----------|
| TI | . | . | . | . | . | . | . | . | . |
| IMD | .891(**) | . | . | . | . | . | . | . | . |
| WEF | .428 | .248 | . | . | . | . | . | . | . |
| PERC | -.636 | -.694 | -.811 | . | . | . | . | . | . |
| 직무유기 | -.525 | -.457 | -.389 | .668 | . | . | . | . | . |
| 직권남용 | -.369 | -.063 | .094 | -.429 | -.233 | . | . | . | . |
| 수뢰 | -.658 | -.634 | -.710 | .632 | .904(**) | -.113 | . | . | . |
| 증뢰 | -.667 | -.610 | -.486 | .595 | .866(*) | -.041 | .992(**) | . | . |
| 공무원범죄 | -.678 | -.587 | -.584 | .615 | .950(**) | -.029 | .979(**) | .967(**) | . |

*p<.05, **p<.01

18) 여기서의 공무원 범죄는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 혹은 공무원 신분으로써 일으키는 모든 범죄를 포함한다.

19) IM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원)

20)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21)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22) 여기서의 공무원 범죄는 범죄의 성격이 공무원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를 말한다.

VI. 결론 및 시사점

공무원 범죄자의 범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공무원 범죄자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64년부터 1997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진영(2001)²³⁾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²⁴⁾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공무원, 경찰, 지방공무원 모두에서 완만한 상승세 혹은 유지를 해오던 것과 비교해 다소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을 제외하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공무원 범죄자 수 기준). 이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느리게 감소하는 경향(2003년 7.7%에서 2006년 11월 2.6%)에 비해 부정부패 방지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이 일부 결실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공무원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부주의, 기타, 우발적, 이욕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개인의 윤리의식부족 등의 순서로 나타난 것과는 내용이 매우 다르다. 이에 반해 공무원들은 개인의 윤리의식부족,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 구조화된 부패문화 순서로 응답하였는데, 실제 공무원 범죄의 동향과 공무원의 응답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의 내용이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실제 공무원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부정부패 혹은 범죄가 공무원 개인의 현실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TI CPI 지수와 공무원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국제투명성기구의 TI CPI는 특별법범의 발생빈도와는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IMD의 부패인식지수는 특별법범 및 공무원범죄와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WEF의 부패인식지수는 형법범의 발생빈도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특별법범의 발생빈도와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ERC 부패인식지수는 특별법범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특별법범과 공무원범죄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별법범의 발생빈도를 통해 TI CPI를 예측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형법범의 발생빈도보다 특별법범의 발생빈도와 부패인식지수와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3) 정진영(2001).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연구 - 뇌물죄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p.77.

2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pp.78-79.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범죄와 관련한 동향을 고찰하고 국민간의 인식과의 차이점을 고찰해 보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부정부패의 척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시각차의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시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의 수립이나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다양한 원인과 배경을 가진 종합적인 사회문제이니만큼 그 처방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무원 범죄자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일심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실천해나가는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노력을 국민에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청렴위원회(www.kicac.go.kr)

김규현. (2005). 『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왕수. (1998). 『한국사회의 부패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발전연구, 제4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김용세. (1998).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사회과학논문집, 제17권 제2호, 대전대학교.

김해동. (1972). 『관료부패에 관한 이론 (I)』,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1972.

대검찰청. (2000). 2000 대검찰청범죄분석.

_____. (2001). 2001 대검찰청범죄분석.

_____. (2002). 2002 대검찰청범죄분석.

_____. (2003). 2003 대검찰청범죄분석.

_____. (2004). 2004 대검찰청범죄분석.

_____. (2005). 2005 대검찰청범죄분석.

_____. (2006). 2006 대검찰청범죄분석.

이승관. (2006). 『지방공무원의 부패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 지방공무원의 부패유형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기섭. (2005). 『우리나라 부패에 관한 공공부문과 사부분간의 인식 비교 연구 - 지방자치 6급이하 공무원과 사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pp.87-92.

정진영. (2001).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연구 - 뇌물죄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최정학. (2003). 『공공부패의 법적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pp78-79.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2006.

저자약력 : 조정원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충주시립도서관에 재직중이다. 관심 분야로는 공무원 부패, 정책(도서관), 지역혁신 등이 있다.(ianjungweon@hanmail.net).

저자약력 : 최영출은 영국 뉴캐슬대학교(University of Newcastle)에서 정책학 박사학위(Privatisation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and the Politics of Transaction Costs)를 받고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The Dynamics of Public Service Contracting: The British Experiences」, 「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거버넌스」 등의 저서와 “지방분권 수준 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의 개발과 적용”, “Prioritizing the Critic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in Korea, with particulart reference to Daedock Valley” 등이 있으며, 현재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ycchoi@chungbuk.ac.kr).